


 금융위원회	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	
보도	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	배포	2016.3.15(화)	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제도팀장 김 연 준(02-2156-9680)		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56-9683)		
	금감원 제재심의국장 이 효 근(02-3145-7800)				채 문 석 팀 장 (02-3145-7802)		

## 제 목 : 제재개혁을 위한 검사·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
- ❶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도록 근거 삭제
- ❷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가중 처벌 등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
- ❸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, 금전제재 가중·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 제고

### 1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는 오늘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의결
  -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·제재개혁의 일환으로 '15.9월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의 후속조치임
  -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
- 금번 규정·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·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·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“개인제재→기관·금전제재로 전환”하는데 중점을 둠
  -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
  -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
  -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, 금전제재 가중·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

## 2 주요 개정사항

※ '15.9.2일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 보도자료 참고

### 1.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

□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

- ①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
- ②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·경영개선사항은 단순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행 부진시 제재 근거를 삭제

#### 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- (기존) A보험사 B과장은 약관 대출 심사시 내규가 정한 일부 절차를 누락하였고,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어 제재 받음
- ⇒ (개정) 보험사 여신 관련 내규 위반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님

### 2.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

#### ① 임원의 복수 금융기관에 대한 연속적 위반행위 합산 제재

-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동일·유사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과거 타 금융기관 재직시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고려해 제재할 수 없었음

⇒ 과거 재직했던 금융기관에서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(이미 제재받은 행위 제외)를 저지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

\*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 양정시 가중사유로 감안

#### 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- (기존) A증권사의 B대표이사는 A증권사 및 과거 임원으로 근무했던 C, D 증권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현재 근무 중인 A증권사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조치 대상이 되어 문책경고 조치를 받음
- ⇒ (개정) B대표이사가 과거 근무하였던 C, D 증권사에서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위반행위도 제재 양정시 고려하여 직무정지로 제재조치 상향 가능

#### ②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신설

- 금융위가 임원 해임을 '권고'하더라도 주총에서 해임을 지연·거부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

⇒ 임원 해임권고시 '직무정지'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

### 3. 기관제재의 합리성 제고

#### ①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

- 금융기관이 다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합가중하지 않아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

\* 누적가중제도는 이미 시행중 (3년 이내 3회 위반 시 1단계 제재 가중)

⇒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,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\* 기관주의 4건 → 기관경고, 기관경고 4건 → 일부 영업정지

#### 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□ (기존) 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

⇒ (개정) 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 → 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

#### ② 확약서·양해각서 제도 활성화

- 현행 확약서·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

⇒ 법규 위반도 필요시\* 확약서·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

\* 행위 당시 위법·부당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행해진 경우 등

#### ③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 (시행세척 개정사항)

-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제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유도

#### 4. 금전제재 가중·감경기준 합리화

□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·감경제도를 개선

##### ①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

감경사유	과태료	과징금
내부통제시스템 시행 등 상당한 주의·감독을 한 경우	과태료 예정금액의 20% 이내 감경 → 50% 이내 감경	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감경 → 50% 이내 감경
정부시책 준수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	과태료 예정금액의 30% 이내 감경 신설	기본과징금의 30% 이내 감경 신설

##### ②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

가중사유	과태료	과징금
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직접 관여한 경우	과태료 예정금액의 20% 이내 가중 신설	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가중 신설
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	과태료 예정금액의 20% 이내 가중 신설	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가중 신설
위반행위의 일수 증가	-	2단계* → 3단계** * 180일 이내: 0.1% 가중 180일 초과: 0.2% 가중 ** 180일 이내: 상동 180일~365일: 0.2% 가중 365일 초과: 0.4% 가중
부과처분 횟수 증가	-	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% 이내 가중 → 20% 이내 가중

## 5. 직원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확대 (시행세척 개정사항)

- 임원이 관련된 위법·부당사항의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제재시 금융기관 자율처리를 허용하여 개인제재의 자율성·합리성 제고

## 6. 기타 제도개선 : 제재 가중·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

- 금융위·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(신협중앙회, 농협중앙회 등)의 제재는 검사·제재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주체에 따라 가중·감면기준이 달라져 제재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

⇒ 금융위·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조치가 있는 경우, 이를 고려하여 가중·감면할 수 있도록 함

### 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- (기존) A신협은 신협중앙회 검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음
- ⇒ (개정) A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을 금감원 검사시 고려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중제재를 하지 않음

## 3 향후 계획

- 동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(세척도 함께 시행)

※ 단,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, 기관제재 경합가중, 기타 감독기관 제재에 따른 가중은 규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

- 금번 개정으로 관행 개선과 규정·세척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대부분 조치 완료

\* ①확인서·문답서 징구 원칙적 폐지('15.5월), ②금융기관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('15.7월), ③컨설팅 중심의 건전성 검사 실시('15.7월~), ④금융기관 임직원 징계시효제도 실시('15.10월) 등

- 과태료·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'16년 상반기 입법예고할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